

경찰윤리

2

경찰윤리의 개념과 의미

행정 윤리의 필요성

- 오늘날의 행정국가에서 행정 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공무원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확대되었음
- 공무원에 의한 공공 권력의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정치사회 환경
- 공직 사회의 부패한 경우
 - 행정의 능률성,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제약
 -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성의 위기를 초래하여 기존의 제도와 질서가 훼손
 - 건전한 사회 규범의 와해로 사회 전반의 생산 의욕을 약화시키고 국가 사회의 정체와 퇴보 초래
- 공직자들은 법규나 관심이 충분하지 않지 않는 경우에도 가치 판단해야 하고, 도덕적 회색 지역에서도 윤리적 판단이 필요
 -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적합한 가치와 규범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,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 관련해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윤리적 판단 필요
- 공직자들은 상관의 명령과 자신의 윤리 기준이 상충할 경우, 양심이 불복종을 요구할 때 도덕적 갈등

- 2012년 12월 31일자 신문기사 제목이다. 두 신문은 어느 검사의 행위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. 주인공은 2001년 임용된 임은정 검사였다. 그는 2011년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을 맡게 되었다. 어떤 사건이었을까.
- 이 사건은 1961년 5·16 군사쿠데타 직후 불법 체포된 고 윤길중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'통일사회당' 사건이다. 윤 전 의원도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. 그에게 적용된 법률은 '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'이었다. 이 법은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1961년 6월 급조되었고 더구나 부칙은 3년 6개월 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벌불소급이라는 형사법의 원칙에도 어긋났다.
- 윤 전 의원을 제외한 인사들은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다. 상급자인 공판2부장은 백지구형을 지시했다. 공판2부장은 임 검사 대신 이아무개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(직무이전명령) 백지구형을 지시하였다.
- 다음날 오전 11시, 공판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. 오전 10시경 임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'징계청원'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"제 능력 부족으로 상급자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지만, 해당 재심 사건의 무죄구형은 재량권 행사가 아니라 의무라고 확신하다"면서 법정으로 향했다. 그는 검사출입문에 "무죄구형을 하겠다"는 쪽지를 붙이고 문을 잠근 뒤 11시 무죄를 구형했다. 법원도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.
- 검찰총장은 징계를 청구하였고,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상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2013년 2월 임 검사에게 정직 4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. 징계사유는 총 4가지였다. ① 상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재판 참석해 무죄구형했다. ②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잠가 다른 검사의 구형을 못하게 했다. ③ 내부게시판에 무죄구형 관련 글을 게시하여 검찰 내부혼란, 국민 신뢰 훼손을 초래했다. ④ 반일 연가 후 퇴근했는데, 오후 2시까지 근무하지 않고 12시경 법정에서 퇴근했다. (오마이뉴스, 2015/02)

경찰윤리의 필요성

- 경찰행정윤리의 의미
 - “경찰공무원이 경찰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경찰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”(이종수)
 - ❖ 윤리란? “한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를 규율하는 행위의 원칙”.
 - 인간의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옳으며 어떤 행위가 악하고 나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
- 경찰행정 업무의 핵심적인 특징은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방지하는 것
 - 따라서 경찰은 갈등상황에서 가치판단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고,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
 - 경찰행정윤리(혹은 경찰윤리)는 경찰공무원 특수한 전문직업 집단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행동기준으로 공공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윤리 규범이라 할 수 있음
- 권력을 권위로 변화시키기 위해 윤리적 정당성이 요구됨
 - 경찰활동의 근거가 필요하고 한계에 대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도덕철학의 정당한 논리가 필요함

- 윤리적 규범체계가 국가적 권위를 통해 강제력을 부여 받음
 - 법의 모습으로 구체화
 - 경찰은 법의 집행을 통해 국가권력을 실현
- 강제력에 대한 국가적 권위를 보는 두 시각
 - ① 한 가지 시각은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으로 경찰을 '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합법적인 조직'으로 판단함.
 - 경찰활동은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룸.
 - 따라서 경찰은 시민들이 존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정당성을 유지해야 함. 이를 위해 경찰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절차, 교육훈련과 감독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함.
 - ② 또 다른 입장은 경찰은 주로 사회운동을 탄압하고 정치적, 경제적 계층의 맨 끝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불평등을 양산하고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봄.
 - 이런 시각은 경찰이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.
 - 경찰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사회질서는 착취 구조에 기초한다고 여김. 즉, 경찰활동은 근본적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.

경찰윤리의 필요성

-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를 담은 규범이 존재
- 근대국가에서 폭력의 합법화와 독점
 - 국가와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는 폭력이고, 국가만이 이를 합법적이고 독점적으로 보유
- 경찰 : 국가의 목적(예, 범죄예방, 질서유지, 공공의 안녕 등)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폭력을 현실적으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집단
 - 정당한 폭력의 행사는 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력
 - 합법적 폭력(혹은 공권력)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,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정당성 인정
 - 경찰은 국가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는 점에서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
- 공권력(권력, 폭력)은 양면성의 특징을 지님
 - 국가의 목적 실현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

- 공권력
 - 국가나 정부가 보유하고 행사하는 권력을 의미
 - 공권력 자체는 일반적으로 국가라는 공동체에 양도된 '물리력'의 전체를 가리킴
 - 오늘날 공권력은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'검찰권'과 '경찰권'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.
- 공권력의 행사
 - 공공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일탈적인 사람들을 제어하는 폭력이나 강제력의 형태를 띰
 -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적 장치는 공권력 사용의 정당성을 전제로 삼음
 - 공권력은 국가 안보, 질서 유지의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됨
- 형식적 정당성은 실질적인 정당성을 항상 보장하지 않음
 - 독재권력의 수단,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,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경찰활동
-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찰 혹은 검찰로 대표되는 공권력의 오/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, 제도, 정책 등이 도입되어 시행됨

경찰윤리의 의미

- 경찰윤리는 행정 업무와 관련된 윤리이다.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의 공적인 행정 업무와 관련돼 지켜야 할 가치 기준이다.
- 경찰공무원의 역할
 - 국민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
 - 공권력에 기초한 경찰공무원의 역할은 가치 배분(예, 자유, 재산, 생명에 영향)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 시민과는 다른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
 -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가능성
- 경찰윤리의 부정부패로 소극적 의미
 - 경찰윤리는 협의로는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돼 소극적으로 이해되지만, 적극적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공익성과 봉사 정신이 강조
- 경찰윤리의 개념은 경찰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물론 경찰공무원이 입안하는 집행하는 정책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.
- ❖ 경찰윤리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통제와 책임의 범위와 수준은 계급이나 직위에 따라 비중이 다르게 적용

- 서울변협 회원이 지난해 피의자, 피고인, 고소인 등의 변호인이나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으로 총 1129명이다. 변호사들은 모범사례 평가 이유로 '공정한 수사와 인권존중', '배려'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. 구체적 사례로는 △수사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고,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확인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함 △필요한 수사자료도 충분히 기일을 주고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함 △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해주셨는데, 사건의 사실관계를 매우 꼼꼼하게 분석하여 질문함 등이 있었다.
- 서울성북경찰서는 이번 평가에서 "피해자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,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적절한 절차 고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잘 알려줬다"는 모범 사례 평가를 받기도 했다.
- 반면 문제의 사례를 평가하는 이유로는 '소극적인 수사'와 '고압적인 태도' 등이 꼽혔다. 또 사건을 방치하는 등 검·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경찰 수사 지연 문제가 여전히 지적됐다.
- 구체적 사례로는 △피해자 고소 대리 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약 11개월 뒤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통지됐고, 이의신청을 하자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을 내렸으나 1년 5개월 경찰에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. △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CCTV 확보에 소극적이었고, CCTV를 확보하려는 피해자를 타박하는 언행. △사건을 진행하기 싫어하는 태도가 역력하며,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몇 십분 동안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등 고의적으로 괴롭히고, 의뢰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무시하는 듯한 고압적 태도. △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여 압박 수사 등.
- 사법경찰관 평가 항목은 △도덕성 및 청렴성 △독립성 및 중립성 △절차 진행의 공정성 △인권 의식 및 친절성 △적법절차의 준수 △직무능력, 성실성 및 신속성 △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으로 구성됐다.

한국의 경찰윤리강령 : 경찰헌장 (1991)

- (친절한 경찰)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な 경찰이다.
 - (의로운 경찰)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,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.
 - (공정한 경찰)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.
 - (근면한 경찰)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.
 - (깨끗한 경찰)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,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.
- ❖ 1966년 경찰윤리헌장, 1980년 새경찰신조, 1991년 경찰헌장, 1998년 경찰서비스 헌장

윤리와 유사 개념들

- 윤리와 도덕

- 윤리(ethics) 와 도덕(morality)는 모두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원리
-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윤리적 행위라 하고, 구성원들의 도덕적 행위를 장려하는 전문 직업집단의 행동규범을 윤리조항
- 도덕과 윤리는 한 사회의 고유한 전통에 근거하고 사회의 주요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권위 있는 규범의 총체

- 행정윤리

- 행정윤리라는 정부조직의 사회적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체계
- 행정이 공무원(경찰공무원)의 도덕적 행위를 요구이고, 공공 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
- 하지만 행정(경찰행정)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도덕적인 것만을 강조할 수 없음.
- 행정(경찰행정)은 관료적 성격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규범(민주주의)과 조직이나 조직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합리적 규범(관료주의)이 필요

- 윤리와 법
 - 윤리와 법은 모두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통제 장치이고 두 용어는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, 실천적으로 매우 커다란 차이점 존재
 - 윤리는 비강제적 수단에 의존하고, 사회적 규제력에 한계
 - 윤리적 규범은 법적 뒷받침에 의해 효과적으로 확보되지만, 비윤리와 위법의 의미와 상호 관계에는 일관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님
- 법, 윤리, 예의범절의 차이
 - 규범이 지닌 '사회적 중요성'에 따른 다르게 평가. 관습의 사회적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사회적 제재와 통제장치로 발전.
 - 사회적 중요성이 매우 큰 관습(예, 살인하지 않는 것)은 처벌과 제재를 수반하는 법으로 구체화
 - 중간 관습(예, 약속 지키기)은 심한 비난이나 탄핵을 초래하는 윤리로 발전
 - 낮은 관습(악수 혹은 인사)은 조롱 혹은 비웃음을 초래하는 예의범절
- 윤리와 법의 경계는 애매하고 혼재
 - 법이 비리를 전제하더라도 모든 법이 윤리적인 것이 아님 (인종, 성, 종교를 차별하는 법)
 - 모든 비리(비윤리적 경찰활동)가 불법도 아님 (예, 편견에 따른 불심검문, 시위에 대한 법집행-'집회 촉진의 개념: 평화적 집회는 보장 및 해산의 대상이 아님'))
 - 불법이지만 윤리적 행동(응급환자 이송차량의 불법 주차)

- 윤리와 부패
 - 부패는 비윤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질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것
 - 행정윤리의 실천적 중요성 때문에 부패 문제는 행정(경찰행정) 윤리에서 부패 문제는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경향
- 경찰윤리
 - 경찰공무원의 능동적, 창의적 행위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억제(통제)하는 데에도 관심
 - 경찰행정에서 윤리적 규범들이 공무원이 실천에 옮겨야 할 행위를 장려할 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될 행위도 규제하는 것
- 경찰의 부패
 -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경찰공무원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내용들이지만, 부패의 유형과 원인은 다양하게 구분되고 설명됨.
 - 경찰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들이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도입됨으로써 경찰행정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정치제도에 부합하는 경향

경찰윤리의 학문적 성격

- 경찰윤리에 관련된 학문적 활동의 특징
 - 경찰공무원들이 직면하는 개인적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개발
 - 옳고 그른 (혹은 좋고 나쁜) 경찰행정 행위의 유형, 장려할 만한 경찰공무원들의 인격적 특성, 정의로운 사회제도의 모습 등을 규명
 - 미덕, 지혜, 옳고 그름, 선악, 의무, 능률, 생존, 배분적 정의 등 행정이 추구하는 다양한 핵심적 가치들의 논리적 의미를 분석
 - 바람직한 경찰행정에 관한 다양한 윤리적 진술의 논리적 사유를 분석
 - 국가공무원법, 윤리조항과 같이 규범체계를 실천하는 윤리적 판단행위를 연구
- 경찰공무원이 윤리적 행동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
 - 경찰공무원(정부)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조정할 윤리적 책임이 있음.
 -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반면, 재정의 집행이나 권력의 소유와 같은 공직의 특징은 경찰공무원에게 상당한 유혹이 됨.
 -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하게 침해 혹은 제약하는 권한 행사

사이코패스의 유전자

-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짐 팔론(Jim Fallon)의 정신병적 살인자에 관한 연구 (짐 팔론의 TED 영상 강의)
 - 연쇄살인자들은 뇌의 안와피질에 손상이 있고, 폭력 유전자들 (MAO-A 유전자)의 손상이 있었음. 이 유전자 X 염색체에 있고, 어머니로부터 유전(XX, 아빠는 XY)됨.
 - 폭력 유전자의 발현은 난폭하게 아동 시기, 사춘기 전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경우에 나타남. (폭력을 직접 목격하거나, 깊게 연관되는 경우)
- 어머니의 특정한 유전자, 뇌손상, 환경
 - 뇌검사와 유전자 검사방식을 통한 연쇄살인 용의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작업
 - 경찰의 목적은 범죄의 효율적 예방과 사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
 - 인간의 존엄이나 인격의 발현 등 인간의 가치에 대한 보호와 유지
 - 자연과학의 발전과 결과물을 국가정책(예, 경찰서비스)로 제도화하는 경우에 윤리적 가치의 고려가 필요
- 경찰의 치안서비스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뇌와 유전자의 정기적 검사, 특정한 환경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연쇄살인 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하는 정책은 수용될 수 있는가?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?

낙태와 범죄율

-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의 주요 대도시 강력범죄율은 크게 하락하였고, 그 원인에 대한 연구와 논쟁은 범죄학자, 경제학자, 경찰전문가, 법 전문가 등이 각자의 입장에서 범죄율 하락을 설명
- 스티븐 레빗 시카고대학교 경제학자는 '깨진창문이론' 혹은 '통제이론' 등으로 범죄가 억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시작된 피임약과 낙태 합법화(1973년, Roe vs. Wade 판결)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.
- 피임약과 낙태 합법화는 20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 잠재적 범죄자의 수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고, 1970년대 피임과 낙태는 범죄를 줄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주장
- 잠재적 범죄자의 특징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
 - 빈곤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.
 - 낙태를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난하고 미혼이며 비싼 불법 시술을 받을 돈이 없거나 조건이 여의치 않은 불우한 환경이 일반적이다.
 -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은 환경의 아이들이 낙태합법화와 피임으로 태어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범죄자가 될 연령(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20 여 년 흐른 시점)에서 범죄자가 감소
-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으로 낙태합법 존속 혹은 확대에 대한 판단은 윤리적 문제